‘유명무실’ 주민 발의 조례, 보완 대책 절실

헌법보장 ‘청원권’… 효과는 글쎄
특정 단체만 조례 통한 혜택 얻어
이익 단체들 ‘목적 달성용’ 전락
문턱 낮추기 무분별 발의 우려도

광주·전남지역 주민 조례 제정이 전무하면서 시행 1년을 넘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주민조례법)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의회에 바로 청구하게 절차를 줄였고, 연대 서명인 수와 청구권자 연령 기준을 낮췄음에도 주민 개인이 청구 조건에 맞게 서명인 수를 채우기란 쉽지 않아서다.

결국 서명인 수를 채울 수 있는 특정 단체들을 위한 조례로 전락할 수 있어 주민 청구 활성화 방안이 절실해 보인다.

1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월13일 시행된 법은 주민이 조례 제정·개정·폐지에 참여하게 해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이 청구권자가 돼 필요한 안건을 조례로 만들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현실화하는 셈이다.

하지만 1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주민 청구를 통해 나온 법안이 없어 해당 법률에 대한 보완 마련이 절실하다.

청구를 위해 기준이 되는 수만큼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수집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 이익 단체들의 ‘목적 달성용’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단체가 청구하는 조례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목표로 하는 ‘풀뿌리 조례’로 보기엔 한계가 있어서다.

조례 청구 과정에서 떨어지는 전문성 역시 오르기 힘든 ‘벽’이다. 주민들이 제출한 조례안에는 행정적인 오류가 많다는 의견이다.

주민 청구와 의원 발의를 모두 해본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의원이 돼서 발의를 해보니 주민 청구를 했을 당시 제출했던 조례안에 고쳐야 할 게 많은 것을 느꼈다”며 “주민 발의를 위해서는 행정적·법률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민이 만든 조례가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 처분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주민 조례 발안이 형식적이고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며 “조례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도적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 서비스 등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명인 수 기준이 낮아진 만큼 서명인 수를 채울 수 있는 특정 단체들의 ‘조례 난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주민 조례 발안 법률을 통해 기준이 완화된 만큼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논의와 함께 주민과 의원들의 협력 관계 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법은 주민이 조례를 만드는 경험을 하고 주도적인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며 “어차피 조례 발의는 의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과 의원의 협력 관계 형성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 교수는 “서명 인원 기준을 낮추는 논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단순히 기준이 낮아진다고 좋은 조례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너무 낮은 서명인 수는 단순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무분별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민주, 국민보고대회 줄세우기 논란

4일 尹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
17개 시·도당 참석자 명단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서울 도심에서 여는 국민보고대회에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17개 시·도당에 별도의 참석자 명단을 요구해 “줄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 등 17개 시도당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사 독재 규탄대회 참석 요청의 건’을 당 사무총장 명의로 보내면서, 참석자 명단 회신 양식을 첨부했다.

중앙당은 각 시·도당의 적극 참석을 요청하며 참석 대상자 명단은 당 조직국에 3일 오후 2시까지 보내달라고 통보했다.

이날 대회의 참석 대상은 당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지역위원회 당원들이다.

중앙당이 줄 세우기를 하려는 듯한 사실상의 동원 명령을 내리자, 지역위원회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여당이나, 이재명 당 대표에게 공천 줄서기 하라는 민주당이나 다를 게 뭐가 있냐”며 “참석자 명단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근거를 남겨서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위원장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자, 단일대오 유지에 신경을 곤두서는 모습이다.

당내 일각에선 이번 장외투쟁 역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민생 파탄을 규탄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재명 지키기’라는 성격도 띠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이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당의 요구에 경쟁적으로 움직이고, 이 대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원팀 기조가 흔들려 당 내분이 본격화할까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면서 “당일 지역위원회마다 깃발을 들고 참여하는 만큼, 참석 명단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는 국회의원들에게 서로 충성 경쟁을 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 투쟁이 검찰 규탄 방향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정치적 탄압은 장외 집회를 여러 번 한다고 극복되는 게 아니다. 규탄만으로는 민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선거제 개혁 논의, 시민과 함께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들이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참여 선거개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25년부터 시·도지사가 국고지원 대학 정한다

교육부 ‘RISE사업’ 발표
시·도지사가 발전계획 수립

오는 2025년부터 교육부가 아닌 광역시장·도지사가 연간 총 2조원 규모의 국고 출연금을 받을 대학을 정할 예정이다.

1일 교육부는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열린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라이즈·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라이즈는 구축을 위해 교육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역발전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혁신 노력을 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2023년~2024년에 5개 안팎의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우수 모델을 만들고, 올해 말까지 법령을 정비한 후 2025년 17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지역 공모는 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라이즈 시범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3월 초 발표된다. 시범 기간에 라이즈에 배정된 별도 예산은 없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